

2018년 4월 7일 시행 / 2018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사회 기출해설 (다책형)

해설 - 이종학 교수(에듀윌)

문 1.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행정 각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 ②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 등은 대통령제 고유의 특성이다.

오답해설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로는 국무총리제도,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의원과 각료의 겸직 가능, 행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국무회의 제도 및 국무회의의 필수심의사항,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이 있다.

문 2.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
을: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하여 야수적이며 단명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 ① 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 ② 을: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 ③ 갑: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정이다.
- ④ 갑: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정답 ①

해설 갑은 루소, 을은 홉스이다. 홉스는 물론 로크, 루소 등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의 형성이 사회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고 여긴다.

오답해설

- ② 사회계약론은 국가를 목적이 아닌 천부인권 실현의 수단으로 본다.
- ③ 루소는 직접민주정치제도를 제시하였다.
- ④ 일반의지는 다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문 3. 다음은 갑국의 2017년 국회의원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 당선자 수 및 정당 득표율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명)	정당 득표율(%)
A	98	43
B	42	32
C	24	15
D	36	10

<조 건>

- A, B, C, D 소속 후보들만 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 1인 2표제를 통하여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였다.
-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득표가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였다.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으며, 정당 득표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였다.

- ①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4년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 선거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 ②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제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 ③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A ~ 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 ④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보다 더 크다.

정답 ④

해설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B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은 21%이고,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은 18%이다. 따라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의 합은 B와 D의 정당 득표율의 합인 42보다 더 작다.

오답해설

- ①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우리나라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제와 동일한 중선거구 소수대표제이다.
- ② 중선거구 소수대표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 ③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A의 당선자 수가 141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문 4. 다음에서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위제에서 양원제로 의회제도를 바꾸었다.
- 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이양하였다.
- ㄷ. 소수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대표결정방식을 바꾸었다.
- ㄹ.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권한을 독립시켰다.

- ① ㄱ, ㄴ, ㅈ
② ㄱ, ㄴ, ㅋ
- ③ ㄱ, ㅈ, ㅋ
④ ㄴ, ㅈ, ㅋ

정답 ②

해설

- ㄱ. 단원제보다 양원제에서 의회의 권한이 분산된다.
- 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경우 수직적으로 권력이 분산된다.
- ㄷ. 행정부로부터의 중앙은행 독립 역시 권력의 분산에 조응한다.

오답해설

- ㉔. 소수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대표결정방식을 바꾸는 것은 의회 구성의 방식이 달라질 뿐 의회의 권한 분산과 관련이 없다.

문 5.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유권자 한 명당 갖고 있는 투표권의 가치가 거주지역마다 다른 지금의 현실이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현재는 2001년 결정을 통해서도 “조만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더 줄여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 ①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②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대표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 ③ 선거구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하였다.
- ④ 국회의원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답 ②

- 해설** 헌법재판소는 최대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과소대표 되었음을 이유로 인구편차가 3:1에 달하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답해설

- ③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므로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 대표성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④ 국회의원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을 실현함으로써 평등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문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기 소유의 A아파트를 을에게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갑은 10일 후 을에게서 중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잔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다.

- ①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②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없다.
- ③ 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정답 ①

해설 소유권 등 물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는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오답해설

- ② 을은 계약을 전후하여 등기부의 열람을 통해 소유권 및 제한물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등기부 열람의 법적 의무는 없다.
- ③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 지급전까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 매매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갑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을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을을 폭행하였다. 갑의 폭행으로 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 기>

- ㄱ.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갑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 ㄴ.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원고가 될 수 있다.
- ㄷ.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ㄹ. 갑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 폭행을 당한 을은 갑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갑은 을의 고소 등을 통해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다. 단, 갑의 형사재판 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오답해설

ㄱ.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을 별개이다. 단, 교통사고 시에는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합의가 공소를 저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ㄴ. 형사재판의 원고는 피해자인 을이 아니라 검사가 된다.

문 8. 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갑이 저녁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TV가 갑자기 폭발하였다. 이 폭발로 갑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거실에 있던 골동품이 파손되었다. 이에 갑은 TV 제조자인 회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① 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 ②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 ③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 ④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정답 ②

해설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상품 소비 중 입게 되는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체에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스스로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공급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등에는 면책이 된다. 하지만 회사가 공급 당시 결함을 알지 못한 이유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문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없음

정답 ①

해설 무죄 추정에 근거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피고인에 대한 공판은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해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1심판결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하고 하며,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그리고 형의 선고유예 시에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이다.

오답해설

- ①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하고 또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로 인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는 심판의 기간 중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④ 위헌법률의 결정 및 탄핵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의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단,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다.

문 11. (가), (나)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 (가) 서유럽에서 발달한 목축업은 유럽인들의 식생활, 의복, 주거문화, 예술활동 등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 (나) 태어난 직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떨어져 살던 일란성 쌍둥이가 키와 얼굴, 운동 및 인지능력은 비슷했지만, 인성

이나 규범적 행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 | (가) | (나) |
|-------|-----|
| ① 공유성 | 총체성 |
| ② 총체성 | 학습성 |
| ③ 축적성 | 공유성 |
| ④ 학습성 | 총체성 |

정답 ②

해설 목축업의 발달로 인해 식생활, 의복, 주거문화, 예술활동 등 다른 생활양식에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문화의 총체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신체조건이 흡사한 쌍둥이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뒤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화의 학습성에 따른 것이다.

문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그는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①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 ② 사회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 ③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정답 ①

해설 뒤르켐은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았다. 따라서 뒤르켐의 관점은 사회실재론에 해당한다. 사회실재론은 개인 행위의 능동성이나 상호작용의 측면보다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오답해설 개인의 희망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사회명목론에서 나타난다. 사회명목론은 사회를 개인의 합과 동일시한다.

문 13. 다음 일탈이론 (가), (나)에 적합한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 | |
|---|
| (가) 누구나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인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탈자가 생길 수 있다. |
| (나)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태도와 가치를 학습한 일탈행동이 나타나 |

기도 한다.

— <보 기> —

- ㄱ.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 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 ㄷ.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 ㄹ. 까마귀 노는 데 백로야 가지 마라.
- 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가)

(나)

- | | |
|-----------|---------|
| ① ㄱ, ㄴ | ㄷ, ㄹ, ㅁ |
| ② ㄱ, ㄴ, ㄷ | ㄹ, ㅁ |
| ③ ㄴ, ㄷ | ㄱ, ㄹ, ㅁ |
| ④ ㄴ, ㄷ, ㄹ | ㄱ, ㅁ |

정답 ③

해설 일탈이론 중 (가)는 머튼의 아노미론에 해당하고, (나)는 차별교제론에 해당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는 문화적 목표와 현실 수단 간 괴리를 아노미의 원인으로 분석하는 머튼의 이론에 부합한다. 반면,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까마귀 노는 데 백로야 가지 마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행위를 습득한다고 여기는 차별교제론과 관련이 있다.

문 14. 다음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관점은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회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잡해진 사회는 단순 사회에 비해 구성원들의 적응 능력이 더 높다고 본다.

— <보 기> —

- ㄱ.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 ㄷ.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도 잘 설명한다.
- ㄹ. 사회 변동을 순환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①

해설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관점에는 사회진화론과 순환론이 있다. 이중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사회진화론이다. 사회진화론은 사회의 변동이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보는데,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등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오답해설

ㄷ. 사회 변동이 생성→발전→쇠퇴→소멸의 단계로 전개된다고 보는 관점은 순환론이다. 순환론은 사회의 발전은 물론 퇴보의 가능성까지 설명한다.

문 15.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

갑국			을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50	30	하층	30	50

- ①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 ② 201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 ③ 을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화였다.
- ④ 갑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화였다.

정답 ④

해설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국			을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중층	30	50	중층	50	20
하층	50	30	하층	30	50

갑국의 사회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화했으므로 이전보다 사회 안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답해설

- ①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 ② 폐쇄적인 계층 구조에서는 계층 구조의 변동이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갑국과 을국 모두 개방적인 계층 구조로 보아야 한다.
- ③ 을국은 다이아몬드형에서 모래시계형으로 변화였다.

문 16.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ㄱ.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이다.
ㄴ. 생산요소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 |
|--|

플레이션을 초래한다.

ㄷ.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산요소의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하며, 역사적으로 1970년대 석유파동 시에 나타났다.

오답해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극심한 경기침체의 불황기에 해당한다.

문 17.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기를 1단위씩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나라 간에 생산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구분	A국	B국
신발(1단위)	7명	6명
전화기(1단위)	9명	5명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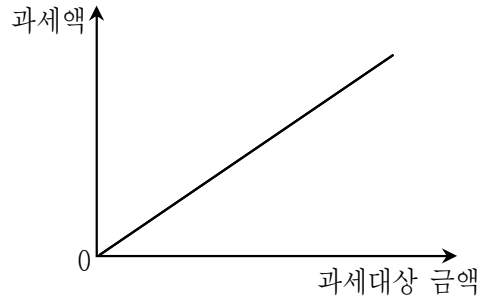
ㄱ.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ㄴ. 신발 생산에 대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는 B국에 있다.
ㄷ. B국은 신발 생산에 절대우위가, 전화기 생산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정답 ④

해설 B국은 신발과 전화기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교우위로 보면 신발에서는 A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전화기에서는 B국이 비교우위를 갖는다.

문 18. 그림과 같은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 ②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이다.
- ③ 누진세 방식이다.
- ④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정답 ④

해설 과세대상 금액에 따라 과세액이 정되는 관계를 보이는 조세제도는 비례세이다. 비례세는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오답해설

- ① 비례세는 조세의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 저소득 계층에 유리한 조세제도는 누진세이다.
- ② 우리나라의 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문 19. X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서 X재의 균형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상품은 정상재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 ① X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 하락
- ②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 ③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 ④ 해외로부터 X재 수입의 증가

정답 ③

해설 균형가격이 오르면서 균형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공급의 감소 시에 해당한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공급의 감소를 유발한다.

오답해설

- ① 대체재의 가격 하락은 수요의 감소를 유발한다.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가격이 내리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 ②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은 수요의 증가를 유발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이 오르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 ④ X재 수입 증가는 공급의 증가를 유발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이 내리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문 20. 다음 ㉠ ~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A국: 생산가능인구(노동인구) 10,000명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40 %일 때, 실업자가 (㉠)명이면 고용률은 (㉡) %이다.

B국: 실업률이 2 %이고 실업자가 300명일 때, 생산가능인구가 (㉢)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 %가 된다.

	㉠	㉡	㉢	㉣
①	200	58	30,000	55
②	300	57	25,000	60
③	300	63	25,000	60
④	200	62	30,000	55

정답 ②

해설 A국의 생산가능인구가 10,00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40%이면 경제활동인구는 6,00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4,000명이다. 만약 실업자가 200명이면 취업자가 5,800명이므로 고용률은 58%가 되고, 실업자가 300명이면 취업자가 5,700명이므로 고용률은 57%가 된다.

B국의 실업률이 2%이고 실업자가 300명이면 취업률은 98%이다. 이때 경제활동인구는 15,000명이고 취업자는 14,700명이 된다. 만약 생산가능인구가 30,000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고, 생산가능인구가 25,000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0%가 된다.